

특검, “朴 대면조사 ‘2월10일 즈음에’”

2월 둘째주 중으로 합의 성사에 주력 방침 세워

압색 임의제출 수용 검토

최순실 뇌물수수 영장 청구

관제대모 의혹 계속 수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안팎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초순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를 이야기하겠다”며 “초순이면 2월10일, 그 언저리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박 대통령측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조율된 상태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못 박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면조사 장소 등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를,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거론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장소 등 형식적인 부분

보다 실질적으로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쪽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에 대해 임의제출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우리는 임의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청와대측은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종결을 해야 하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시효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체포영장도 이번 주 중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재판일정을 고려해 우선 소환조사를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가 피고인으로 참석

하는 재판은 오는 10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청와대의 관제대모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현준(48)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내 최대 보수 우익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관제 대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허 행정관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허 행정관이 관제대모를 지시한 배경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관제대모 지시 의혹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안철수-천정배-정운찬과 손잡고 저녁이 있는 삶 실현”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7일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불평등과 저성장, 이종고는 국민 생활을 위협한다”며 “무능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이 나라를 절단 내기까지 여야 기록권 정치세력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정치권에 시민혁명을 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을 시민혁명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개조해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테러를 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패권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과하다”고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 세력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주권회의와 국민의당은 반패권과 반기득권을 지향해 왔다. 언제나 정치적 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록권을 내려놓는 책임정치를 실천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화해협력 노선의 총실한 계승자”라고 자평했다.

손 의장은 “안철수의 공정성장, 천정배의 개혁정치, 정운찬의 동반성장과 손을 잡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라며 “우리의 통합은 개혁세력 총결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혁정치 수립에 찬동하는 모든 개혁세력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

김부겸 의원, 대선 불출마 선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정권교체를 위한 밑일이 되겠다”며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룰 논의에 불참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권공동정부 수립을 주장해 왔지만, 박 시장 불출마 이후 공식 불출마선언을 미뤘었다. 정치권에선 이후 지지율이 미미한 김 의원의 불출마를 접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 의원 불출마로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3파전으로 좁혀지게 됐다. /뉴스



7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재명 “2월 내 탄핵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53) 성남시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대접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는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현재 재판관들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나 새누리당의 태도, 거리의 여러 상황을 보면 기록권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이 잠시 현장을 떠나고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 기록권들이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결정을 미루거나 부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특검도 압수수색을 거부한 세력을 공무집행방해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일부가 채택될 경우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7시간 행정, 국가 권력을 이용한 대규모 범죄 등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싸워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손학규, “새만금 개발 적극 지원하겠다”

“전북도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국민의당과 통합선언으로 본격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예산 때문에 새만금 개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7일 국민의당과 통합 직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손 의장은 “미래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새만금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집권하면 전북의 젓줄인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히 “우리와 함께 진정한 정권교체와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이 변화시대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손 의장은 “호남이 없었다면 개혁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전북도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장은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

당의 통합은 개혁세력 총결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전북의 모든 개혁세력도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손 의장은 “더 좋은 세상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잘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에도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과려했다.

한편 도내 지방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손 의장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길에 노인복지관에서 각계 각층 200여명과 타운홀 미팅에 이어 과학기술원 본원 현장방문, 남원시민 간담회 등으로 전북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인재용 기자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朴, 공모”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김상률·김소영 불구속기소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문화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화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문수석은 노태우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적시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단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보고 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 실행부서인 문체부장관실 장·차관 등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사법처리했다”며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마무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종덕(60) 전 문화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이어 이들의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또 최순실(61·구속기소)씨 역시 일부 피의사실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신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 명의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활용됐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화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전북기협, 유력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 12일부터 개최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전북기자협회가 유력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지역과 전북의 의제를 묻는 토론회를 연다.

전북기자협회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대선, 지역을 묻다’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토론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 문재인 전 대표를 시작으로, 14일 오전 10시 30분 안철수 전 대표, 18일 오후 2시 이재명 시장, 22일 오전 10시 30분 유승민 의원, 25일 오후 2시 안희정 도지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이다.

사회는 유기하 전 전주MBC 보도국장이 맡고 패널로는 전북기자협회 소속 전현직 보도·편집국장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지방 청년 실업 문제 등 전국을 관통하는 지역 의제와 함께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다양한 질문을 통해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 특화 형태로 진행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비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 발전과 좋은 대선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전북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북비전위원회는 크게 대선전략기획단과 전북공약추진단 등 2개 단장과 전북의제발굴위원회, 대선공약 선정위원회, 전북예산 추진위원회, 민생실천위원회, 전북비전연구소 등 4개 위원회, 1개 연구소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비전위원회 위원장은 김춘진 도당 위원장이 맡게되며, 부위원장은 이춘석,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7개 지역위원장과 송하진 지사 등 총 11명이 맡았다.

또 상임고문에는 황원 도의회 의장이 맡았고 시군 자치단체장, 시군의원 등 20명의 위원을 뒀다.

앞으로 전북비전위원회는 대선 공약과 전북발전 정책을 발굴하게 되며, 선정 및 제안 등을 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국주영은, 인터넷 지원 가구중 443가구 미사용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지원 2만5,300가구 중 PC미보유 또는 PC고장으로 인해 443 가구가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매년 4,678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차단프로그램 설치 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정보화 역기능 차단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됐다”며, “인터넷 지원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 통신사를 통해 1개월 이상 PC 통신수신 없는 가정을 파악한 후 인터넷 지원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인재용 기자